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9. 1.(목) 11:00 < 9. 2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1.(목)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민우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 김효선 (044-203-4212)

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

- 53건(337조원) 투자프로젝트 중 37건(268조원)은 애로 해결방안 확정

- 경제단체, 지방투자 협의회 통해 규제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속 발굴중

□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**투자 주도형 성장을 촉진**하기 위해 **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** 중에 있다.

○ 산업부는 9.1일(목) **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부내 점검회의를 개최**하여 지난 **6월 발굴한 53건,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**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 투자 **진행상황을 점검**하였다.

○ 아울러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하였으며, 기업, 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**9월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**할 계획이다.

□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**337조원*(53건)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(37건) 프로젝트**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**旣 해결 또는 해결방안을 도출**하여 **조속한 기업 투자실행 기반을 마련**하였다.

*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관련 주요애로와 지원방향을 6.15일 발표(보도참고자료)하였으며, 기업투자 규모는 대외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

❶ 규제·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

〔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〕

○ A사는 **수요응답형 여객운송*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**이나, 현재 **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**되어 사업 확장에 애로

*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·정류장·시간 등을 여객수요에 따라 운용하는 운송서비스

☞ **여객자동차법 개정**(국토부)을 통해 **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**해나갈 계획이다.

* A사는 현재 규제특례로 세종, 파주 등 2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광교, 고양, 양주, 위례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

○ B사는 **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할 계획**이나,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·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**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**를 **종량제 봉투, 농업용, 어구류 등으로 한정**하고, **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도 제외시켜 국내 시장 창출이 제한적**일 것으로 우려

☞ 금년 중 **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***을 **마련**(환경부)하여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, **시범적 회수·처리시스템을 구축**(산업부)하여 **환경성·경제성 등을 평가**하고 **별도 회수·처리시스템 구축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**해나갈 것이다.

* 활용 기준 마련, 대상 제품군 선정 등 추진하고, 환경표지 인증 등 인센티브 유지

*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대량생산을 목표로 파일럿 플랜트('23년), 생산설비 등 구축 예정

○ C사는 **산업부산물을 CCU 기술로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** 중이나, 해당 부산물이 **폐기물로 분류, 폐기물관리법상 규제***가 **적용**되어 사업화에 애로

* 폐기물배출자 신고, 전용차량 이용, 처분(재활용) 기준 준수 등

☞ **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***(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, 환경부)하여 **폐기물을 활용한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**해나갈 것이다.

* 순환자원 인정기준 : (현행) 고형폐기물, 다른 종류 폐기물과 혼합금지, 추가 가공없이 재사용 가능 등 9개 요건 충족시 인정 → (개선) 2개 요건 충족시 인정

* C사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('22.12월) 이후, 사업투자 재검토 추진계획('23년 初)

[**유턴·외투 등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**]

○ D사는 **해외 생산공장**을 **매각**하고 **국내에 투자할 계획**으로 유턴 제도 활용을 희망하나,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 상 **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어려우며** 기존 **국내 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**되어 **활용이 곤란**

☞ 해외 사업장 청산 후 **국내 투자기한을 3년까지 연장**(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, 기재부)하고, **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**하는 경우도 **유턴대상으로 인정**('22.4분기 유턴법 시행령 개정, 산업부)할 계획이다.

* D사는 '24년 말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준비중으로 금년 하반기 시설장비 반입 계획

○ E사는 **첨단산업 장비 R&D 투자를 계획** 중으로 외투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, 현금지원의 지방비 매칭 협의가 지연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움

☞ **첨단산업 육성**에 대한 **국가적 중요성을 고려**하여 **국가전략기술 관련 외투 현금지원 국비 분담률을 10% 상향**(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)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**지자체와 현금지원을 지속 협의**해나갈 계획이다.

* E사는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이며,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

[**용적률, 산단 입주업종 제한** 등 입지규제 완화]

○ F사는 **열분해유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**이나, **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**되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

☞ **업종분류에 대한 적극 해석**(산업부)으로 **산단 입주를 허용**('22.6)하였으며, **근본적으로 산단 입주업종 제한 관련 애로 해소**를 위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**산단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상향**(30→50%)하였다.

* F사는 산단 입주허용 이후 투자에 바로 착수, 계약 체결 완료('22.8월) 및 착공예정('22.10월)

○ G사는 **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**으로,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**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**을 건의

☞ 금년 중 반도체 등 **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**는 **용적률을 350%에서 최대 490%까지 확대**(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, 국토부)한다.

* 2개 반도체단지의 클린룸 개수가 21개 → 30개로 확대, 9천명 고용증가효과가 전망

❷ 신속·유연한 행정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

○ H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**지자체와 부지계약 협상이 장기화**되면서 **적기 생산역량 확충이 어려움**

☞ 산업부는 **지자체와 긴밀한 협의**를 통해 기업-지자체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, **금년 7월 계약체결이 완료**되어 **원활한 투자가 진행중**이다.

* H사는 계약체결 이후 경관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

○ I사는 **배터리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**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진행중인 **교육환경평가로 인한 투자 지연을 우려**

☞ 지자체·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**先 시설투자, 後 교육환경평가 추진**으로 **기업 투자의 신속한 진행**이 가능하였다.

* I사는 '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중

○ J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**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**망하고 있으며, **반도체 기업 우선 입주지원을 요청**

☞ 산업적 중요도, 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하여 **용인플랫폼시티 내 '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'를 조성**하고, **수의계약, 조성가 공급을 제공(경기도)**할 계획이다.

* J사 '25년 용인플랫폼시티 분양시 부지를 확보하여 R&D 센터 설립 계획

○ K사는 차세대 전지 전용 제조시설 투자를 추진 중으로 **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투자세액공제 절차의 간소화**를 요청

☞ 세액공제 심의시 **비용을 제외한 기술만 심의**하고, **비용심의**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일괄 검토토록 하여 **세액공제 심의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**한다.

❸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으로 지원중인 투자

○ L사는 **디지털플랫폼 기반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**할 계획으로 국내 **시장 창출**을 위한 **지원사업 신설**을 요청

☞ **국내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을 확대**('23년 2,000대 목표)하는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.

○ M사는 그간 가동이 중단되어온 **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를 계획** 중이며, **부족한 현장인력 확보, 급증한 물류비 부담 완화** 등 지원을 요청

☞ **현장인력 공급**은 **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('22.7~)을 통해 지원**하고, **해상 물류비는 3년간 지방비로 지원**할 계획이다.

* M사는 금년 10월 재가동을 목표로 설비보수 및 추가설비 구매를 추진중

□ 아직 **미해결된 16건**은 대부분 예산·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, **산업부는 관계부처,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***하여 **해결방안을 모색**해나갈 계획이며,

* N사 기계장비 공장 구축을 위한 국유지 이용 허가, O사 배터리 연구소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

○ 해결방안이 마련된 **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**이 이뤄질 수 있도록 **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**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다.

□ 아울러 **추가 기업 투자프로젝트**도 **지속 발굴하여 지원**해나갈 것이다.

○ 산업부는 보다 **다양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폭넓게 조사**하고 **지원**하기 위해 **부내 업종·기능별 담당과와 업종별 협단체**뿐만 아니라 **경제 5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지역 기업의 투자애로 발굴**을 위한 「**찾아가는 지방투자 협의회***」도 꾸준히 추진해왔다.

* 지역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(6.7), 대구(6.9), 전북(6.15), 충남(6.24), 광주(6.29), 경북(7.7), 강원(7.22), 부산(8.8), 울산·경남(8.16) 등 10차례 협의회 개최

□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"**저성장 극복의 해법**은 **기업 투자**에 있으며,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**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**하는 것"이라고 언급하였다.

○ 또한, "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**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***도 추진하여 **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**로 운영해나갈 것"이라 하면서,

* (例) 유턴·외투 지원요건 완화, 연구개발세액공제 절차 간소화, 첨단산업 용적률 상향 등

○ 금년 **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**에도 핵심 전략으로 **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**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